

# 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땀 농민 민생 책임져야”

“본안 취지 훼손 않는 범위 내 수정안은 적극 검토하겠다” ‘횡재세’ 입법 추진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에 대한 민생과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흑시라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이 실용적

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며 “다만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민주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퍼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인데 내달 2일에 60일 기일이 도래한다. 안전운임제는 오는 8일이 기일이요 간호법과 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5일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더 나은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처리하되 일방적으로 사업주의견만을 반영해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개악적 요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층,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 또 횡재세적 성격 갖고 있는 고유가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업 기금 등에 대해 전향적 대책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땐 횡재세와 관련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3+3 회의에 대해서는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고 있고 특별한 진전도 없다”며 “이번주 내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면 원내대표 회의로 넘기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 가능한 부분을 부분 처리하든지 택일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 승격, 이 두 사안은 합의됐기 때문에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고 여성가족부 관련은 현재 여야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여가부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성안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등 관련된 운동 본부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관련 엿박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정책위의장은 “엿그제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강북 지역의 32세대인가 36세대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걸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공가루 정부지 싶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 기준 절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당정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

주호영 “지원 대책 꼼꼼히 짜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틀 뒤 난방비와 관련해 당정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연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금 더 꼼꼼히 짜고, 지원 대책도 마련해서 충실한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측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중산층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완성성이 안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될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당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논의하기 위한 것이 당정인데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 정부에

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혜택 등을 대폭 확대하고 어제 예비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 정부와 당은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추운 겨울 나고 계신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예정됐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도 연기했다. 특히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 회의에서 난방비와 에너지 공기업 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직까지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당정협의회도 앞두고 있어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금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이 난방비 급등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 “미분양 주택 분양가 매입은 부실건설사 특혜”

“할인 매입 후 공공임대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 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현재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시가, 분양가가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걸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을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의 주거안정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보신 것처럼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쏠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방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

## “尹정권 탄압서 이재명 지켜야”... 민주 교육연수원 발대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당의 역량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당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당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에서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일”이라며 “중앙당 연수원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연수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정봉주 민주 교육연수원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민주당이다. 부원장들이 모두 다 이재명”이라며 “민주당을 사수하고 당 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교육연수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니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탄압이고 검찰 정권의 폭격”이라며 “야당 대표와 야당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준동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민주당은 과연 무엇

을 할 것인가, 민주당 당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당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당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하고, 민주당이 하나 되는 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압은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킨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더욱 가혹한 탄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당원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 與, 컷오프 규모 확정... 당대표 4명·최고위 8명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 10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각각 당대표 경선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회의를 열고 컷오프 규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컷오프 규모를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 청년최고위원은 4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경쟁후보가 많지 않아 5명으로 추리면 너무 후보가 많다”며 “관행에 따라 4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회의에선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4명 컷오프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현재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강신업 변호사까지 모두 6명이다. 예비경선을 통해 압축된 3명의 후보가 최종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에는 이만희·박성중·허은아·태영호·지성호·이용 의원, 김재원·정미경 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보수 유튜브인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정이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종배 서울

시의원, 김영호 전 보좌관은 청년 최고위원직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관위는 오는 5일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은 오는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방식은 책임당원(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전날 당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규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서울=김선욱 기자